



반전 · 반자본주의 노동자 운동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이명박 OUT 특별 호외 6호

www.counterfire.or.kr

맞불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110-612 /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atgmail@nate.com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 (백은진)



지난 40여 일 동안 우리는 한국 사회를 뒤흔들며 역사를 창조해 왔다. 우리의 저항은 이명박 지지율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렸고, 조중동을 쓰레기통으로 보내고 있다.

정부가 고시를 두 번이나 연기하고, 고시를 강행하고도 다시 관보 게재를 유보하게 한 것도 저항의 힘이였다. 경찰도 그동안 연행자 5백여 명을 대부분 풀어 줬야 했다.

17대 국회 내에 '재벌천국'을 위한 종합선물인 한미FTA를 통과시키려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계획도 파탄났다. 이회창까지 '재협상'을 주장하고 정두언과 박영준이 내놓고 티격태격하는 등 저들 내부의 심각한 다툼도 일었다. 극우익 조갑제는 "사태가 더 악화되면 경찰관들 가운데서도 시위 대열에 합류하는 이들이 생길지 모른다"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나 2MB 정부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청와대 홍보수석 추부길은 "사탄의 무리들이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했다. <오마이뉴스> 보도를 보면 이명박은 최근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머릿속에서 온갖 어이없는 꿈수만 나오고 있다. 촛불 항쟁은 이미 이명박 자신을 겨냥한지 오래인데, 쇠고기에만 그것도 '30개월 문제'에만 매달리는 걸 보라. 그조차 '재협상'도 아닌 '자율 규제'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막겠다고 한다. 심지어 전 세계적 거짓말쟁이인 조지 부시와 전화 통화로 우리를 안심시키려는 시도는 제정신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탄의 무리

<한겨레21>과 인터뷰한 "내 딸에게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안 먹인다"는 한 쇠고기 수입업자는 "내가 죽지 않으려면 이걸(30개월 이상 쇠고기) 받아서 팔아야 한다"고 실했다.

이 상황에서 '몇 명이 전리품을 독식하려 [한대]'(정두언)며 권력 다툼에 정신없는 자들도 역겹기 짝이 없다. 곧 한나는 내각교체도 '쇄신'이 아니라 이런 아귀다툼의 과정일 것이다. 더구나 머리(이명박)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꼬리만 잘라봤자 제2·제3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미친 소닷넷'의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 중 무

려 54퍼센트가 '이명박이 퇴진하거나 쇠고기, 대운하, 민영화 등이 해결될 때까지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고 답했다.

따라서 촛불 항쟁은 이명박의 미친 정책들 — 쇠고기, 대운하, 의료 · 공기업 민영화, 입시지옥화, 물가 폭등 부채질 — 에 대한 반대를 내걸고 이명박 퇴진을 목표로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이명박 퇴진을 가능케 할 세력(조직 노동자)과 수단(파업)이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그 점에서 화물연대의 6월 13일 파업 돌입 결정은 반갑기 그지없다.

청와대를 압박하는 위력적인 가두행진과 거대한 파업 물결이 결합된다면 촛불 항쟁은 위대한 승리로 마무리될 수 있다.

주간 <맞불>을 정기구독하십시오

6개월 / 2만 5천 원

(신문값 2만 원 + 우송료 5천 원)

1년 / 5만 원

(신문값 4만 원 + 우송료 1만 원)

www.counterfire.or.kr

reader@counterfire.or.kr

전화 : 02-2271-2395

계좌 번호 : 국민은행 048402-04-014849

(예금주 : 백은진)



단호한 투쟁을 호소한 고(故) 이병렬 님

지난달 25일 미친 소 수입과 이명박 정권에 반대해 분신한 이병렬 님이 9일 오전 끝내 숨졌다. 우리는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명박 정권에 분노한다. 그의 처절한 몸짓을 '정신병자의 소행'으로 치부하려 했던 이명박의 치졸함에 화가 치민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서민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온몸을 바쳐 싸우던 투사였다. 그는 분신하기 직전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미군기지 확장에 맞서 싸우던 평택에도, 한미FTA 반대 시위에도,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우는 곳이라면 그는 어디든 함께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그는 분신하기 직전 자필로 쓴 유언물을 시민들에게 나눠 줬다. "우리는 단호히 맞서야 한다. ... 구속도 싸움도 정당한 폭력 [투쟁도 감수]해야 한다."

"학생들마저 저렇게 싸우는데 대체 단체들은 뭘 하고 있는 거냐"던 그의 호소와 한 달 동안 진행된 촛불집회가 울림이 되어 민주노총은 지금 총파업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죽음으로 호소한 조합원의 목소리에 민주노총은 즉각 강력한 파업으로 응답해야 한다.

미친 소 수입과 온갖 개악들을 저지하고 나아가 이명박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그의 넋을 달래자.

짜증나는 노무현의 헛소리

최근 노무현은 “정권 퇴진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 질서에도 없는 일 … 이명박 대통령이 잘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망언은 잠시 잊었던 노무현 5년의 기억을 일깨운다. 최근 ‘촛불시위 진압 장면’이라고 인터넷에 뜬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 영상이 알고 보니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었듯, 지금 이명박이 하는 짓 대부분은 노무현이 미리 했거나 판을 깔아 둔 일이었다.

이건희 같은 비리 재벌과 론스타 같은 투기자본이 멋대로 날뛰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예고편이었다. 이랜드 여성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3번이나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도 노무현이었다.

조중동의 도움 속에 이라크 파병,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이명박의 앞길을 닦아 준 것도 노무현이다.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나라에서 미국 쇠고기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시작한 것도 노무현이다.

사기꾼, 배신자의 충고를 귀담아 들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고유가 종합대책 –

푼돈 받고 집에 가라?

지난 6월 8일 이명박 정부가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천3백80만 명에게 월 5천~2만 원씩 “대국민 촛지”를 쥐어 줄 뚝은 민심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혀 보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투쟁이 이명박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낸 것이지만, 유가 인상으로 더 겹친 세금을 노동자·서민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는 이번 대책은 조삼모사식 처방에 불과하다. 화물연대나 레미콘·덤프 노동자들의 적자를 전혀 줄여 주지 못할 뿐 아니라 고유가에서 비롯하는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노동자·서민을 지원하기에 액수도 터무니없이 적다.

이명박 정부는 땅부자들의 중부세, 재벌들의 법인세는 깎아주려 하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부담이 가는 간접세인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에는 끝까지 반대한다. 또, 물가가 오를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출 대기업들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연대와 레미콘·덤프 노동자들처럼 싸울 필요가 있다. 또, 정부가 재벌·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물가 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명박의 ‘괴담’

재협상하면 경제 망한다?



지난 6일 이명박은 “재협상을 요구하면 통상 마찰로 … 경제에 충격”이 온다고 국민들을 협박했다.

그러나 재협상 요구가 통상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명백한 과장이다. 이미 1990년대 초부터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양국은 여러 차례 재협상을 벌여 왔다. 이번에도 이명박 취임 후 미국이 재협상을 요청해 수입 조건이 모든 연령과 부위로 확대된 것이다. 미국은 페루에서 국회 비준까지 끝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을 요구해 관철한 바 있다.

진원지

이명박과 지배자들의 실제 속마음은 괜히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꺼냈다가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 한미FTA 비준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위기로 시작해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고 있는 진원지인 미국과 FTA를 맺어 경제를 성장시켰다는 생각이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설사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그 몫은 부자들에게만 돌아갈 뿐이

다. 멕시코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후 9년간 외국인 직접투자는 4배 이상 늘고 수출은 2배 이상 늘었지만, 실질임금은 7.9퍼센트 하락하고 실업률도 5.4퍼센트 증가했다.

사실 이명박의 경제 감각은

믿을 게 못 된다. 이명박이 손만 대면 물가가 올랐다. 특별 지정된 ‘MB품목’ 52종은 평균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랐다. ‘747’ 경제 공약은 추락했다.

한국 경제의 적색신호라 불리는 경상수지 적자는 이명박이 당선된 뒤 1~4월 동안 67억

8천만 달러로 ‘IMF 외환위기’ 때 90억 달러 적자 이후 최대다. “당선하는 그 날부터 경제가 확 바뀔 것”이라더니 정말 그렇다.

서민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은 쇠고기 재협상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 정책이다.

‘자율 규제’ 사기극

이명박은 ‘자율 규제’가 “재협상과 다름없고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가 수입되지 않”는 다며, 부시와의 20분간 전화 질로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러나 8백 곳 넘는 수입업체 중 70곳만 자율 규제에 서명했고, 70곳의 ‘자율적’ 동의가

다른 수입업체를 ‘규제’할 법적 구속력도 없다. 오히려 수입업체는 행정절차법, 대외무역법, WTO농업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율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 미국 소 중 정확한 나이를 추적할 수 있는 소는 20퍼센트밖에 안 되는데다

가 월령 허위기재를 적발할 방법조차 없다.

게다가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1백 건 이상 발생했는데, 이번 ‘자율 규제’ 조처는 30개월 미만 쇠고기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수입을 전면 허용하고 있다.

미친 소 장사꾼·전쟁광 조지 부시가 한국에 온다

조지 부시가 7월 초에 한국에 온다. 우리는 재벌에게만 이익이 되는 한미FTA 비준을 위해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라는 이명박이 싫은 만큼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부시도 싫다.

그런데, 알고 보면 부시는 참으로 ‘명박스럽다.’

부시는 이명박처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파괴하는 자다. 예컨대 대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복지 혜택을 삭감해 왔다. 가난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무려 3천5백만 명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부시와 이명박은 침략 전쟁을 지지한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부시는 세계 최고의 전쟁광이다. 이명박은 부시의 끔찍한 전쟁놀이 장단에 맞춰 춤추고 싶어 한다. 이명박은 “자이툰 부대[이라크에 파병된 한국군 부대]는 기름밭 위에 있다”고 말하며 이라크 점령 지원을 정당화했다. 최근엔 아프가니스탄

에 한국 경찰을 파견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거짓말

부시의 전쟁놀이 때문에 전세계는 매우 불안정해졌다. 1백40달러까지 치솟은 유가 폭등 움직임도 따지고 보면 부시가 세계 최대 산유 지역인 중동을 침략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부시는 1백20만 명을 죽인 이라크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박스런 거짓말을 많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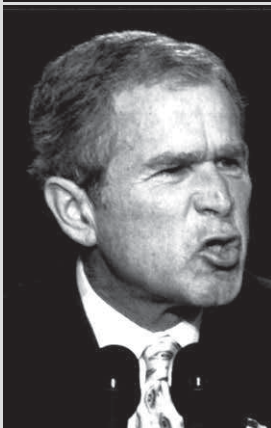
했다. 부시는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말했지만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우병 위협에 대해 이명박이 한 거짓말들이 떠오르지 않는가?

부시는 매우 오만하기도 하다. 부시의 말단 꼬봉에 불과한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조차 마치 자신이 식민지 총독인 듯 착각해서 “한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나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는 인종차별적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동안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만행들 — 노근리 학살, 박정희·전두환 등 독재자 지지, 여중생 압사 사건 등 — 을 떠올리며 치를 떨었을 것이다.

부시와 이명박은 7월 정상회담을 한·미 대기업들의 이익을 위한 광우병 동맹과 침략 전쟁 동맹을 강화하는 자리로 만들고 한다. 투쟁을 계속 성장시켜 7월 초 ‘명박스런’ 부시와 ‘부시 같은’ 이명박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 주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이 한국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 이명박을 만나러 온다.



부시! 우리는 너를 환영하지 않는다!

부시 방한 향의 집회

일시: 7월 5일(토) 시간·장소: 추후 공지

주최: 한미FTA반대범국민운동본부, 파병반대국민행동 등

이명박 퇴진을 목표 삼아 운동을 전진시키자

“이명박은 물러나라”는 수십만 명의 외침이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득 메우고 있다.

지배층은 집권 3개월 만에 등장한 정권 퇴진 구호가 실제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거둬들인 배신으로 이명박 당선에 1등 가는 공을 세운 노무현은 “정권 퇴진은 헌정질서에 맞지 않다”며 헌정질서 파괴범 이명박의 구원투수 구실을 자처했다.

이런 주장들의 영향 탓인지, 개혁 성향의 NGO나 일부 언론들도 정권 퇴진을 운동의 목표로 삼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한겨레> 성한용 선임기자도 정권 퇴진 요구에 대해 아직은 “대다수 … 속마음까지 그런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나 ‘미친소닷컴’의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퍼센트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가장 외치고 싶은 구호로 “이명박 물러나라”를 꼽았고, 33퍼센트는 실제로 이명박이 퇴진할 때까지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21퍼센트도 쇠고기 수입 문제뿐 아니라 대운하·공기업 민영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싸워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의 지지율은 아예 1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사람들의 이런 정서는 이 운동이 시작할 때부터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었다. 운동의 근저에는 경제 위기에서 오는 불만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명박의 각종 ‘재벌 프렌들리’ 정책에 대한 총체적 반감이 놓여 있었다. 이런 분노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런 대중적 의지를 더욱 자신감있게 대변할 필요가 있다. 꼴통 “강부자 프렌들리” 이명박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한, 미친 소 수입뿐 아니라 일련의 재벌전국·서민지옥 정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권 퇴진”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진정한 목표로 삼고, 운동이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물론 정권 퇴진 투쟁으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운동에서 논쟁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로에서 더 분명한 변화를 열망하는 쪽의 대중을 지지·고무해 운동이 더 전진하도록 만드



는 것이다.

<오마이뉴스> 칼럼니스트 유창선 씨처럼, “대안적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권 퇴진은 … 혼란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물론 개악과 배신의 5년을 보낸 민주당, ‘짜퉁’ 한나라당인 자유선진당 등 주류정당들 중 그 누구도 대안이 아님은 분명하다. 촛불의 눈치를 보며 양다리를 걸치던 민주당은 국회로 돌아가 한나라당과 야합할 기회를 노리기 시작했다.

대안

그러나 만일 운동이 이명박 퇴진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한다면, 이명박의 퇴장 이후 가장 큰 힘을 갖는 것은 바로 아래로부터의 목소리와 요구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다음 정권을 잡은 그 누구도 쫓겨난 이명박이 밀어붙였던 정책들을 다시 실행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정권 퇴진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지는 전혀 예정돼 있지 않다. 상황의 주도권은 이명박 퇴진을 기꺼이 대비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쪽이 쥐게 될 것이다. 민주노동당·진보신당·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 등 지금 운동에 적극 참가하는 조직된 진보세력이 단결해 평범한 사람들의 대안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이들이 이명박 퇴진 이후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정권 퇴진을 목표로, 광우병 쇠고기 수입·대운하·의료보험과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등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이명박에 대한 중요한 불만을 결집시키는 명칭과 조직으로 거듭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각 지역과 기층으로 조직을 확대해 이명박에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더 광범하고 단단하게 연결시키는 구심점 구실을 해야 한다.

이명박을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 경제 자체를 멈춰버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조직 노동계급이 파업이라는 계급적 행동으로 이 운동에 함께해야 한다.

촛불의 목소리

이명박 정권이 재협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촛불을 놔야 할 것이냐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 대통령직을 놓지 않는 한 재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합법을 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한 시민

참여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니 국민들이 위대하다는 생각합니다. 촛불이 한달째 계속되는 데 쉽게 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광우병 문제만이 아니라 산적해 있는 대운하라든가 민영화라든가 교육 문제로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렬 (회사원)

6월 10일을 기점으로 총력투쟁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노동 총파업 계획은 약간 늦는 것 같습니다. 6월 10일을 기점으로 총력 투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기아차 노동자

민주주의는 법률, 제도,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연세대 학생

미국산 쇠고기 먹기 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겁이 없어집니다. 청와대로 쳐들어 갑시다.

7살 초등학생

대한민국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입니다. 임시정부입니다.

한 시민

폭력/청와대 진격 논란

최근 시위에서 쇠파이프가 등장하자 정부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시위대를 비난하고 나섰다. 이는 극소수의 돌출적 행동을 빌미로 시위를 공격하고 6월 10일 행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다.

그러나 정부는 시위대의 ‘폭력’을 문제 삼을 자격이 없다. 87항쟁 당시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보여 주듯이 국가야말로 조직된 폭력 집단이다. 이번에도 물대포와 소화기, 방패, 곤봉을 동원해 비무장한 사람들을 짓밟고 시위대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먼저 흥분시킨 것은 바로 경찰이었다. 14살짜리 청소년이 경찰 방패에 머리가 찢어졌고, 머리·눈·손 등이 찢어져 병원에 실려 간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다.

대중 행동의 힘을 모아 청와대로

무엇보다 폭력의 근원은 바로 한 달 동안 사기만 치며 대중의 절박한 요구를 묵살해 사람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이명박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경찰 버스를 넘어서 원흉의 근거지인 청와대로 가고 싶은 심정을 가질 만하다.

그럼에도 소수의 조급한 폭력 사용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조직적인 국가 폭력 앞에서 소수가 전경 개인을 폭행하거나 개인적으로 경찰 버스를 부순다고 해서 청와대로 가는 길이 뚫릴 리도 없고, 이명박을 무릎 꿇릴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 첩자(프락치)들이 스며들어 일부러 폭력을 조장하고 정부와 조중동이 시위의 폭력성을 과장해 문제를 호도하기도 더 쉽다.

그렇다고 ‘비폭력 무저항’으로 일관하

자는 것도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분노의 초점이 이명박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로 나가자는 주장은 정당하고 필요하다. 경찰이 우리의 정당한 청와대 진출을 막고 계속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시위대의 방어적 물리력 사용은 필요악이다.

필요악

단, 개인적인 방식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충분한 수의 경험 있고 단련된 사람들이 적절한 도구를 사용해 경찰들에 대처하고 이를 거대한 시위대열이 뒷받침해 준다면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찰을 물러서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조차 충분한 대중적 힘이 뒷받침될 때에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애초에 청계광장 주변을 원천봉쇄했던 경찰이 며칠 뒤에는 세종로 사거리와 청와대 터밀까지 진출하는 시위대를 함부로 막을 수 없었던 것도 경찰의 예상을 뛰어넘는 시위의 급격한 양적 성장 때문이었다. 거대한 시위 규모는 전경들의 사기저하를 낳아 전투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시위 규모가 1백만 명을 넘는 수준으로 도약한다면 청와대 진격이 공문구가 아닐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런 가두행진이 이윤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동자 파업과 결합한다면 이명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강력한 파업으로 이명박의 숨통을 조이자

화물연대 파업은 들불처럼 번져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의 촛불 시위 참가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조직 노동자들은 단지 집회 대열의 일부로 참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임무를 한정해선 안 된다. 생산에 타격을 가해 이명박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 같은 고유의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 점에서 화물연대의 13일 파업 돌입 결정은 너무나 반갑다. <조선일보>는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때 “물류를 마비시켜 나라를 결판낼 강자들”이라고 별 별 떠벌었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6월 4일 대표자회의에서 광우병 쇠고기·민영화·대운하·물가인상 등에 반대하는 파업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전 국민적 반(反)이명박 여론이 명백한 상황에서 바로 파업에 돌입했다면 정말 좋았을 것이다.

그 점에서 대표자회의 때 급속노조 등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주장했던 지도자들이 즉각적인 파업에 부정적이었다는 소식은 안타깝다. 이것은 국민과 함께하는 태도가 아니다.

자동차 4사 노조 지도부가 파업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도 안타깝다. 민주노총의 주력부대가 이럴 때 앞장서야 하는데 말이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찬반 투표를 확실히 조직해야 하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파업을 시작해야 한다. 혹시,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루 파업 정도 시늉만 할 생각은 절대 말아야 한다. 화물연대에 이어서 덤프연대 파업도 6월 16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기회

그래서 이명박이 반격을 가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틈도 주지 말아야 하고, 노동자·서민을 끔찍한 고통으로 몰아넣는 미친 정책들과 이명박 정부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이명박이 위기에 처해 있고, 국민들이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지금 같은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다.

겁에 질린 기업주들(경총)과 조종동



은 지금 신경질적 비난을 퍼붓고 나섰다. 정치 파업은 불법이며, 파업은 경제를 어렵게 하고, 쇠고기 수입이 잘 마무리돼 FTA가 통과되면 노동자에게 이롭다는 황당한 논리까지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 쇠고기, 민영화, 대운하, 물가 폭등 등에 반대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서민을 위한 정당한 요구다. 경제를 망친 것도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다. 한미FTA는 비정규직화와 고용유연화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만 안길 것이다.

한편,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구조조정 문제 같은 현안 투쟁이 급선무’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파업 조직이 어렵다고 보는 듯하다. 공공부문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애초에 하반기나 연말쯤으로 잡

아둔 민영화 반대 투쟁 일정에 얽매는 듯하다. 그러나 구조조정에 맞선 싸움도 지금이 적기다. 반드시 쇠고기 수입 반대를 내걸지 않더라도 같은 시기에 함께 파업한다는 게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일부 노조 지도자들은 필수유지업무제 등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악법이 부담스러워 머뭇거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악법을 무력화시키기에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현장 활동가들의 구실이 매우 중요하다. 활동가들은 소극적인 지도부에 대한 비판에 머물지 말고, 공공연한 파업 선동에 나서야 한다. 기아차 화성공장 활동가들은 공장 내 여러 ‘현장조직’을 규합해 파업 호소와 출퇴근 선전전을 벌였다. 이런 일들이 더 확산돼야 한다.

동맹휴업과 시험 연기를 통해 투쟁을 이어가자

학생들 사이에서 운동 참가 열기가 뜨겁다.

특히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막론하고 여러 대학에서 조직한 동맹휴업이 학생들의 참가 열기를 높이는 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지난주에 서울대·성공회대·성신여대·부산대·부경대·동의대·부산교대·대구교대 학생들이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반면 아쉽게도 많은 학생회를 포괄하고 있는 ‘21세기 한국대학학생연합’은 부산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층의 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동맹휴업을 조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80퍼센트 이상이 지지하고 수십만 명이 거리 시위에 참가하는 상황에서 동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난 한 주 동안 ‘다함께’ 학생 회원들이 소속 대학과 지역 인근 대학에서 동맹휴업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배포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10일에도 고려대·전남대 등에서는 동맹휴업이, 나머지 많은 대학에서도 총궐기가 조직되고 있다. 이 성과들을 이어 나가야 한다.

집단적 대응

10일이 지나면 많은 대학에서 시험 기간에 들어간다. 최근 이명박이 비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명박은 아마 학생들의 시험 기간도 천금 같은 기회로 여길 것이다.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과 경쟁해야만 하는 압력에서 자유로워지려면, 학생회가 이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무기한 동맹휴업이나 시험 연기를 조직하는 등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개별 학생들은 집단적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는 동료 학생들과의 학점 경쟁 압력 때문에 행동에 동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학생운동 내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주의적 혼란 때문에 총투표를 거치지 않고 동맹휴업을 조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잘못된 분위기도 있는데, 이미 압도적 여론이 존재하는 마당에 투표라는 절차를 거치느라 행동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대학생들이 동맹휴업과 시험 거부로 10일 이후 거리 시위의 동력을 이어 간다면, 이명박 정권의 심장부를 강타할 조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함께’는

사람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이명박의 시장 만능주의와 미국 부시 정부의 침략 전쟁에 반대합니다. 성·성 지향 인종 등에 따른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함께’는 다른 세계를 만들기 위해,

- 사회 문제와 대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쟁하는 열린 광장 ‘대학 맑스주의 포럼’, ‘지역 사회포럼’을 개최합니다.
- 세계와 한국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진보적 시각으로 다루는 주간 신문 <맞불>을 발행합니다.
- 한미FTA반대, 파병반대, 비정규직 차별반대 등 정부와 기업들이 세계를 망치는 일을 막기 위한 활동에 적극 참가합니다.

‘다함께’에

가입 하십시오

- 기업의 이윤을 위한 민영화에 반대하십니까? ☐
- 비정규직화에 반대하십니까? ☐
- 부시의 침략 전쟁에 반대하십니까? ☐
- 임시직육과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십니까? ☐
- 토론하고 논쟁하고 함께 실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함께’에 가입하십시오.
전쟁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해 함께 투쟁합니다.

‘다함께’는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도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 : 국민은행 694701-01-227958(예금주 : 백은진)

<맞불>과 ‘다함께’를 후원해 주세요

‘다함께’는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일절 받지 않고 회원들의 회비와 지지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다함께는 이명박 반대 시위에서 호외, 손팻말과 스티커를 대량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진실과 저항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지도록 정성을 모아 주십시오.

※ 후원계좌 (예금주 백은진)

국민은행 694701-01-227958 / 하나은행 197-910005-87207 / 우리은행 1002-130-549338 / 신한은행 308-12-498840
웹사이트(www.alltogether.or.kr)에서 핸드폰결제 / CMS 신청도 가능합니다.